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6·2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개시 하루 전인 1일 후보자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D-120인 2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시장·전남도지사 선거 D-120 쟁점과 변수

돔구장·J프로젝트 성과 5·18 당시 행적도 촉각

시민배심원제 도입 여부도 후보 결정 좌우

2일로 6·2 지방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날부터 예비등록과 함께 사실상 선거전이 시작된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에서도 시·도지사 경선 열기가 뜨겁다.

초반 쟁점과 변수는 3가지로 압축된다. J프로젝트 등 지역현안과 공천방식, 그리고 5·18 당시 행적 등이다.

◇**지역현안**=광주시의 경우 돔구장 건설 문제, 전남도는 J프로젝트 성과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광주시장 출마에 나선 양형일 전 국회의원은 다음 집행부로 돔구장 건설 여부 결정을 넘기라고 하고 있고, 강운태 국회의원은 무등경기장 활용에 무게를 둔 발언을 계속하면서 쟁점화를 예고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J프로젝트에 재평가 움직임이 거세다. 주승용 의원은 J프로젝트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극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석형 전 함평군수는 F1대회와 같은 성과위주 대형 프로젝트에 밀려 도정이 표류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공천방식 논란**=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시민공천 배심원제에 대한 논란은 경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후보 선정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론조사 선두 후보의 경우 이를 기반으로 국민(참여)경선을 할 경우 무난한 승리를 예상할 수 있지만 시민공천 배심원제를 도입할 경우 얼마든지 상황은 뒤집힐 수 있다. 반대로 2~3위를 달리는 후보가 얼마든지 선두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가 되는 것이다. 시민 배심원제에 대한 여론동향, 광주 국회의원들의 입장, 그리고 후보자들의 반응이 시민 배심원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에는 국민참여경선이 도입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결선투표 도입 여부와 함께 ▲체육관 경선인지, 여론조사인지 ▲당원 대 일반인 비율은 얼마인지 ▲체육관 경선인 경우 어느 지역에서 실시되는지 등이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결선투표 도입에 대해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박준영 지사 측은 거부감을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후보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등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5·18 당시 행적**=광주시장 후보 경선의 경우 관료 출신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5·18 유족회, 부상자 회, 구속부상자 회 등 5·18 민주화운동 관련 3개 단체가 1일 '이례적'으로 입후보 예정자들의 30년 전 5·18 당시 행적을 스스로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변수로 등장했다.

주요 후보들의 80년을 전후한 당시 행적을 측근들과 인물 프로필을 통해 살펴봤을 때 박광태 광주시장은 정당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강운태 의원은 내무부 공무원이었다. 또 이용섭 의원은 재무부에 있었고 양형일 전 의원은 대학원 석·박사 과정 중이었다. 정동채 전 문광부장관은 기자 생활 중 해직됐고, 전갑길 광주 광산구청장은 1975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85년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거창에서 사회운동을 했으며 진보 신당 윤난실 전 광주시의원은 당시 학생이었다.

아직까지 특정 후보에 대한 공격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없어 쟁점화할지 불분명하지만, 당시 역할에 따라서는 변수가 될 가능성은 농후하다는 것이 지방정가의 일반적 관측이다.

하지만, 5·18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민감한 시기에 이례적인 요구는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금품·연줄… 정치비리 온상

6·2 지역살림꾼 제대로 뽑자

〈목 차〉

상 깨끗한 한표 행사

중 줄세우기 공천 그만

하 이제 정책선거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둘이나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갑갑합니다. 두 의원이 사이가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누가 더 힘이 센지도 판가름하기 힘들어서 줄을 어떻게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배심원제'다, '국민경선'이다, '인터넷 투표'다 하며 오락가락하고 있는 경선방식도 이런 행태를 부채질하고 있다. 경선방식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 더욱더 지역구 의원에게 잘 보이는 것밖에 없다는 판단

벌써부터 '줄대기' 과잉 충성 폐해

오락가락 경선방식 과열 부채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줄과 금품을 동원해서라도 특정 정당의 공천권을 거머쥐려는 줄서기 행태가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은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현실 때문에 이런 현상이 심각하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중앙당 고위관계자들도 이런 현실을 이용해 은근히 줄세우기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에서 입지자들이 충성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6·2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접수된 공천헌금 및 불법정치자금수수 사례는 없다. 하지만, 전남도의회의 경우 일부 도의원들이 지역구 의원 의정보고회 참석을 핑계로 도의회 임시회에 불참하는 등 공천 따내기를 위한 과잉 충성 폐해가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일부는 경선 규정을 문의한다며 전화공세를 하고 있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을 찾는 입지자들도 많다. 민주당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일부 출마 예정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 행사에 꼬박꼬박 참석, 눈 맞추기에 나서는가 하면 직접 지역구 의원의 의전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잘 보이려다가 출마 예정자들끼리 언성을 높이는 촌극도 벌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광주 모 구청장 공천을 놓고는 상당수의 출마 예정자들이 주요 경력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 직함을 앞 다투어 내세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중앙 정치인들도 지방선거를 계기로 줄 세우기에 나서며 정치적 기반 다지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흘리며 출마 예정자들의 줄서기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대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조직을 다질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앙 정치인들도 당권과 대권 등을 위해 지방선거에 은밀히 개입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줄 세우기와 줄서기를 통해 당선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지자체 운영과 집행부 견제 기능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후보들의 진입을 가로막아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훼손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 차원의 철저한 관리와 공정한 경선 방법 도입, 냉정한 유권자의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전남도의원 2006 지방선거 돈 공천 수사

민주당 옛 지도부 겨냥하나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수억 원을 건넨 전·현직 전남도의원 2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오는 6·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할 경우 민주당과 지역정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도의원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3억 원씩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30일 구속된 양모(65) 전남도의원과 박모(66) 전 전남도의원을 상대로 6억 원이나 되는 '공천 헌금'을 누구에게 건넸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전·현직 도의원이 공천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것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돈이 흘러들어갔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수사의 초점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권을 행사한 옛 민주당 지도부다.

검찰은 그러나 "돈을 받은 특정인사를 공개할 단계가 아직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아직 밝힐단계는 아니지만, 당시 지도부 대부분이 현재도 민주당 소속인 만큼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조만간 관계자들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조만간 '공천 헌금'을 받은 '몸통'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설이 검찰 주변에서 설득력있게 나돌고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은 지방선거 와중에서 '돈 공천'의 주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수 있다. 어떤 개혁공천을 하더라도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지원 "돈공천 절대 없다"

"목포지역 정치문화 새롭게 바꿀 것"

박지원 민주당 의원(목포)은 6·2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든 돈 공천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목포지역위원장인 박의원은 1일 지역위원회 대의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구태와 타락의 오명을 뒤집어 쓴 목포의 정치문화를 새롭고 깨끗하게 바꾸어 가는 것이 저에겐 소중한 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언제부터인가 목포의 정치문화는 돈 공천과 돈 선거에 물들어 있었다"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언했듯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건 돈 공천을 하지 않겠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돈 선거는 막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목포사회를 갈등과 분열과 대립으로부터 화합과 단결과 상생의 공동체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목포는 과거 여러 선거에서 시민과 당원들 사이에 정치적인 갈등이 있어왔다"면서 "모든 정치세력을 한데 모아 대통합의 단초를 마련하는 일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민주당 복당 이후 1년 5개월 여만인 지난달 22일 제1차 목포시지역위원회 상무위원회를 통해 계파를 초월한 대의원 892명을 선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